

# 李 대통령, 토허제 완화 논란 반박 “갭투자 허용 주장은 과도한 해석”

비거주 1주택자 한시적 예외 검토  
형평성 보장을 위한 매도기회 강조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필수 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사진)이 11일 비거주 1주택자 토지거래 허가 예외 방안 검토가 일시적으로 갭투자를 허용하는 셈이라는 지적에 대해 “사실상 갭투자 허용 주장은 억가(억지로 꼬투리를 잡아 공격한다)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구 트위터)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실거주의무를 유예해주는 것은 일시적으로 갭투자를 허용하는 셈이라는 주장이 담긴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타깃으로 ‘비거주 1주택자’를 설정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엑스를 통해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갭투자 허용’이라는 논란이 확산

산하자 대통령이 직접 설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정책이 투기 수요를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의 매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한적 예외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

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기간 때문에 4~6개월 내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주고 직접 입주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잔여 임대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는가.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토부에서도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토허구역 안에서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더라도 입주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틀은 동일하게 유지된다”며 “토허구역 지정 이전처럼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국민 70%에 최대 25만원 지급

###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4인가구 기준 3월 건보료 32만원 이하  
18일부터 지급... 첫 주만 요일제 적용

우리 국민의 70%인 3600만 명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취약계층에 이은 2차 지원으로, 이달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25만 원씩 지급된다. 우선 고액자산가는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가구는 올해 3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3만 원 이거나 13만 원을 밑돌면 받는다. 외벌이 4인가구 대상자는 건보료 32만 원 이하라면 대상이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소득 하위 70% 국민 선정기준 등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1인당 45만~60만 원을 지급한 이후 2차 지원이다.

주민등록상 거주지별 편차가 존재한다.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49곳은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40곳은 25만 원을 각각 받는다.

소득 하위 70% 국민 선정 기준일은 올해 3월 30일이다. 해당일 기준 주민등록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해 대상자를 추렸다.

주소지가 다를 시에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동일 가구)로 본다. 다만 부모

는 피부양자인 경우에도 다른 가구로 간주한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중심이 되는 건보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전부가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은 공시가(1주택자 기준)가 약 26억 7000만 원 수준인 경우 해당한다. 금융소득 2000만 원은 연이자율이 2%일 때 예금 10억 원, 배당수익률 2%일 때 투자금 10억 원 수준이다.

이 경우 고액자산가로 분류돼,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 대상은 약 93만 7000가구, 250만 명가량인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선정 기준액을 보면 외벌이 직장가입자의 경우, 세대원(가구원) 수별로 ▲1인가구 건보료 13만 원 ▲2인가구 14만 원 ▲3인가구 26만 원 ▲4인가구 32만 원 ▲5인가구 39만 원 이하 등이다. 합산액이 이 기준액과 동일하거나 하회하면 지급 대상자다.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1인가구 4340만 원 ▲2인가구 4674만 원 ▲3인가구 8679만 원 ▲4인가구 1억 682만 원 이하 등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1인가구 8만 원 ▲2인가구 12만 원 ▲3인가구 19만 원 ▲4인가구 22만 원 ▲5인가구 24만 원 등이다.

가구 내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가구’의 경우엔 ▲2인가구 14만 원 ▲3인가구 24만 원 ▲4인가구 30만 원 ▲5인가구 36만 원 등이다.

고유가 지원금 2차 신청과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1차 지급 대상자도 2차 지급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만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의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1, 2차 기간 지급된 지원금은 모두 8월 31일 자정까지 사용 가능하다.

카드사 홈페이지 등의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동안 24시간(단, 신청 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접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 마감) 운영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 KREI “중동사태, 수입 소고기·닭고기 가격 밀어올려”

석유 가격 폭등에 따른 해상운임 영향

중동 사태가 수입 소고기·닭고기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 국제 석유류 가격 폭등에 국제 해상운임도 같이 오름세를 타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11일 기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해외 주요 축산물 수급동향’에 따르면 3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1683으로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36% 뛰었다.

지표 SCFI는 국제 해상물류의 최신 추이를 나타낸다. 최근 홍해 항로 불안까지 겹치면서 해운시장 변동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축산물은 대표적인 냉동·냉장 컨테이너 운송 품목 중 하나다. 유류비와 운임 등의 상승은 수입단가는 물론, 국내 유통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난 4월 소고기 수입단가는 kg당 8.79달러로 전년대비 6.6% 올랐다. 미국산이 1.8%, 호주산이 12.4% 상승을 기록했다.

같은 달 닭고기 수입단가는 더 큰 폭으로 뛰었다. kg당 2.31달러로 전년대비 15.8%나 올랐다. 이 중 브라질에서 들여온 닭고기는 2.40달러로 20.9% 급등했다.

국제 유류가격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3월 세계유류가격지수는 127.7로

1년 전보다 7.9% 올랐다. 특히 소고기 가격지수가 13.8% 급등했다.

그나마 돼지고기 값은 오르지 않았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의 공급 확대 덕분이다. 4월 국내 돼지고기 수입단가는 전년대비 1.8% 내렸다. 다만 향후의 문제는 사료·냉동보관·가공 비용이다. 중동전쟁이 장기화할 시 수입단가 오름세가 사료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KREI는 “올해 국가별 공급 여건 및 물류 상황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metro

## 정부, 이례적 노사 압박... “사회적 책임감 가져야”

>> 1면 ‘제도화 없으면 결렬’서 계속

정부는 이번 협상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책점검회의에서 “삼성전자가 또 하나의 가족, 삼성”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노사 모두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조정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협력업체와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언급하며 중재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번 사후조정에서 합의안이 도출될 경우 노조는 총파업을 철회하고 임금협약 체결로 이어지게 된다. 성과급 지급 기준이 일부라도 명문화될 경우 삼성전

자 보상 체계는 물론 대기업 전반의 성과급 협상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렬될 경우 삼성전자는 창사 이래 두 번째 총파업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 2024년 첫 파업은 참여 인원이 노조원의 15% 수준에 그쳐 생산 차질이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7만 3000여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초기업노조가 파업을 주도하는 만큼 참여 인원이 약 4만 명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생산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4월 대규모 집회 이후 애플, HP 등 주요 고객사들의 공급 안정성 관련 문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KB증

권은 18일간 파업 시 D램 3~4%, 낸드 2~3%의 글로벌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JP모건도 DS부문 매출이 최대 5억 9000만 달러(약 8조 원)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파업이 끝난 이후에도 설비 정비비와 수출 회복에 3주가량이 추가로 소요돼 생산 정상화까지는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 사후조정이 결렬될 경우 자율 교섭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파업 예고일인 21일까지 열혈에 불과하다. 12일 오후 2차 조정 회의 결과에 따라 총파업 실행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구남경 기자 koogija\_tea@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 기준			
5월 18~7월 3일 소득하위 70%에 10~25만원씩 지급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우대	특별
10만원	15만원	20만원	25만원
가구별 건보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3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상 가구원 적용			
가구원수	직장	지역	혼합
1인	13만원	8만원	-
2인	14만원	12만원	14만원
3인	26만원	19만원	24만원
4인	32만원	22만원	30만원
5인	39만원	24만원	36만원
6인	43만원	29만원	38만원
7인	47만원	32만원	42만원
8인	51만원	40만원	49만원
9인	54만원	44만원	51만원
10인 이상	58만원	47만원	55만원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수 1명 추가한 기준금액 적용			
			자료/행정안전부